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3, pp.275-288
<https://doi.org/10.29212/mh.2022..123.27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평] 국제무대에 다시 등장한 타이완(중화민국)

— 경인문화사(장수야 지음, 정형아 옮김),
『한국전쟁은 타이완을 구했는가?: 미국의 대 타이완 정책을
풀어내다』 —

박영실*

본고는 경인문화사(장수야 지음, 정형아 옮김)가 2022년에 발간한 『한국전쟁은 타이완을 구했는가?: 미국의 타이완 정책을 풀어내다』에 대한 서평이다. 필자는 이 책에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정책이 변화되었다가 한국전쟁을 통해 다시 미국의 입장이 수정되었음을 미국 자료를 통해 고찰하였다.

1. 양안(兩岸)갈등의 시말

2022년 5월 11일 현지시각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5일 공개한 ‘미국과 타이완 양자 관계 개황’에서 “타이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완은 중국의 일부분”, “미국은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이 부분이 삭제된 배경과 경위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부는 타이완관계법, 미중 3대 공동성명, 6대 보장에 기초해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하나의 중국’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명시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넘었다. “한국전쟁은 타이완을 구했는가?”라는 이 책의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했던 전쟁이 타이완의 입장에서는 구세주의 선물이 아니었을까.

저자 장수야(張淑雅)는 국립타이완대학에서 역사학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에서 미국외교사를 전공하여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번역하고 수정한 것이다. 저자는 미국에서 수학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자료를 활용하면서 미국의 정책 수립과 정책 결정의 견해 차이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중화민국(타이완) 정부가 타이완에서 어떻게 생존하게 되었는지를 연구하였다.

저자는 트루먼·아이젠하워 대통령도서관 소장 자료와 국무부, 국방부, 육군부, 국가안전보장회의, ECA(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MSA(Mutual Security Agency)와 주 타이베이 미국대사관 등 여러 기관의 공식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이 책은 1장 전언부터 10장 결론까지 총 10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필자는 1949년의 상황인 2장부터 1953년까지의 내용을 구성한 제9장까지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소제목은 적고, 타이완에 대한 미국 내 각 기관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이 책의 연구사적 가치 및 평가에 앞서 책의 구성 내용을 간략히 소개 하겠다.

2. 책의 구성 내용

가. 제1장 전언(前言)

타이완을 ‘위험한 해협’이라고 칭하는 학자들과 함께 미국에서도 타이완 해협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대립해온 시간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연합국을 지휘하던 미국은 종전 후 국공내전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였다. 그리고 1945년 말 대통령 트루먼(Harry S. Truman)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마셜(George C. Marshall)을 중국에 특사로 파견하여 국공내전을 조정하려 하였지만 결국 이 임무는 실패하였다.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이하 CIA)은 중공이 체제를 갖춘다면 즉시 중국 영토 내의 모든 반공세력들이 결집할 것을 예상하였고, 특히 국민정부의 타이완은 겨우 3년은 버티겠지만 중공이 중국 전역을 소탕할 계획이 있다면 1950년 말에는 타이완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공산세력이 집권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나. 제2장 타이완 분리(1949)

1949년 중화민국 정부가 내전에서 패함으로써 중국 본토에서 타이완으로 퇴각하였다. 국민정부가 타이완 성 주석으로 임명된 사람은 천청(陳誠)이었고, 당시 미국은 타이완을 “권력의 진공상

태”로 평가하였다. 1943년 12월 카이로회담의 결정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타이완은 중국에 반환되었고, 1945년 국민정부가 타이완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1947년 발생한 2·28사건으로 많은 타이완 사람들은 중국에서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게 되었다.

1948년 11월 초 미 국무부는 1948년에 중국 내전이 악화되었을 때 타이완이 소련의 지시를 받는 중공 하에 편입되면 미국의 안보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고, 합동참모본부(Joint Chief of Staff)가 NSC 37로 첫 번째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산당이 타이완을 접수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안전에 유리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미국 군부는 타이완의 전략적 가치가 미국이 대가를 지불하여 보호할 만큼 높다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1949년 한 해 동안 국무부는 여전히 ‘외교와 경제적 조치’를 통하여 타이완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다.

결국 1949년 3월 1일 NSC 37/5 문서를 트루먼 대통령이 비준하면서 미국은 군사적인 수단을 배제, ‘경제와 외교적인 조치’로서만 타이완이 공산당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이 양쯔강을 도하한 후 주중 참사 머천트(Livingston Merchant)는 NSC 37/5를 재검토, 재평가하고 동시에 다른 선택을 모색해보자고 건의하였다.

이후 타이완문제를 유엔에 이관해 해결하자는 내용이 논의되었지만, 국무부의 유엔 담당관 러스크(Dean Rusk)는 이 구상에 냉담했다. 1949년 여름 이후 국무부 내에서는 미군이 직접 타이완을 방어하자는 의견과 타이완이 당시 충분한 군사력과 재정으로 스스로 방위할 수 있으므로 미국이 실제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상충하였다.

그리고 12월 타이완성 주석이 천칭에서 미국 유학과 출신인 상하이 시장 우귀쩨(吳國楨)으로 바뀌고, 타이완성 출신들이 주요 관직에 자리잡게 되었다.

다. 제3장 수수방관(1950년 1월 ~ 6월 24일)

1950년 1월 5일 트루먼의 입장은 미국 정부는 중국 내전에 개입하지 않으며 같은 이유로 군사원조나 의견을 타이완의 중국군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수수방관’이었다. 그러나 당시 영국이 일부 비공산권 국가들과 함께 중공 정권을 승인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미국 의회, 학계, 언론계, 선교사 단체, 경제계의 대다수가 중공 정권 승인에 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국무부는 성급하게 중공과 친선을 도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트루먼 정부는 중공과의 관계개선을 준비하면서 국민정부와의 관계 단절을 구상하고 있었고, 2월의 정보평가에 따르면 타이완이 1950년 말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공이 베이징 주재 미국 영사관 재산을 몰수하고 2월 14일에는 마오쩌둥(毛澤東)과 스탈린(Иосиф Сталин)이 「중소우호동맹호조조약(中蘇友好同盟互助條約)」을 체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조약은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예상했던 소련과 중공과의 분열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중공이 하이난도(海南島)와 저우산군도(舟山郡島)를 점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국무부 내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미국의 타이완 정책은 제고되었다.

4월 7일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역사가 개디스(John Lewis Gaddis)가 한국전쟁 기간의 ‘전략암호’라고 칭한 NSC 68을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이 문서에는 미국이 공산주의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 것이 반영되었고 공산당에게는 약하게 보이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1950년 상반기 미국의 타이완 미래에 대한 태도는 무관심에서 제한적인 관심으로 변경된 것이었다.

라. 제4장 중립 추구(1950년 6월 25일 ~ 11월 15일)

당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타이완 해협 중립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제7함대를 파견하여 타이완의 중립화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민정부에게는 미국이 결정한 정책을 전달하였다.

당시 국민정부는 유엔의 조치에 호응하여 3만 3천명의 군 병력을 한국전쟁에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미국은 맥아더 사령부에서 타이완의 방어계획과 능력을 평가하기 전에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타이완 해협 중립화 선언 이후 미국은 기존의 군사원 조정책을 수정했고, 국민정부와도 동맹을 맺게 되었다. 한국전쟁 발발 1개월 후 합동참모본부는 타이완에 긴급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그 후에 정식으로 원조계획을 수립할 조사단 파견을 주장하였다. 7월 27일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NSC 37/10문서가 채택되었는데, 이 안에는 공동방위 원조금 중 1,434만 4,500달러가 군사지원계획 경비였다.

에치슨(Dean Acheson)과 트루먼이 타이완의 ‘중립’을 유지하려 했던 반면, 군부는 타이완의 방어를 중요시했다. 이에 맥아더는 7월 31일 타이완을 방문했고, 8월 27일 맥아더가 국제전쟁퇴역군인협회(Veterans of Foreign Wars) 연례회의 발표 자리에 섰을 때 그의 발표문에는 미국이 여전히 타이완을 군사기지로

삼으려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러한 맥아더의 행동에 국무부는 분노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미국은 타이완 문제에 개입하였지만 워싱턴의 입장은 무기한 타이완을 보호할 생각은 없었다.

마. 제5장 제한적인 전쟁(1950년 여름 ~ 1951년 봄)

1950년 9월 중순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자 워싱턴의 긴장 태세가 잠시 완화되었다.

그러나 중공이 개입하자 상황은 변했고, 러스크는 만약 중공이 한국전쟁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타이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하면 미국은 티베트와 인도차이나 문제를 함께 건의하자고 유엔에 제의하였다. 그리고 국무부 중국과(中國課)의 스투어트(Wallace W. Stuart)도 중공이 인도차이나반도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보장하면 타이완을 중공에 넘길 수도 있다고 제안하였다.

중공의 개입 후 미국의 정책기획자들은 모종의 해·공군 군사행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당시 고려했던 작전은 화학전, 타이완 부대를 운영하는 간접적인 방안, 동북지방에 대한 현지폭격을 포함해 원자탄 사용도 고민하였다.

바. 제6장 정책의 전환(1950년 12월 ~ 1951년 5월)

중공은 정전협상 조건에 타이완 문제 논의를 포함하였고, 맥아더도 국부군 활용을 위한 원조 증대를 요구하였다. 이에 워싱턴은 타이완의 가치와 기존에 결정했던 대 타이완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 다시 평가하게 되었다.

당시 미국은 공산세력의 확대는 원하지 않았으나 한국전쟁 초기부터 충돌이 한반도 밖으로 확산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판

단했다. 그리고 이 시기 유엔군이 계속 패퇴하자 그들도 타이완 군대 활용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애치슨은 12월 4일 국방부에 서한을 보내 미국 국가안전에서 타이완의 전략적 가치를 합동참모본부에서 다시 평가할 것을 요청하면서 경제와 외교적 수단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중공의 타이완 점령 방지를 연구하게 하였다.

그 결과로 나온 ‘국가정보평가(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이하 약칭 NIE)’ 보고서에 따르면, 국부군이 한국 전선에 투입되어도 유엔군이 한반도에서 최후의 방어선을 지킬 수 있는 기회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었다. 이 견해는 맥아더의 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다. 군부와 국무부는 국부군의 사기, 작전능력과 그 능력의 공헌도에 의구심을 품었다. 국부군 활용과 함께 타이완 해협의 중립 유지 문제도 대두되었고, 이 두 가지 문제는 모두 장제스(蔣介石) 정권과 다시 제휴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애머슨(John K. Emmerson)은 1951년 미국의 대 타이완 정책을 중공과 소련의 행동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국무부 중국과에서 제출한 「포모사(Formosa)」 정책분석보고서에 한국전쟁 발발 후 미국의 일관된 주장이던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는 입장이 변경되었다. 이제 미국의 외교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오히려 실리주의 정책에 근거해서 정립되기 시작한 것이다.

사. 제7장 태도의 변화(1951년 5월 ~ 1952년 3월)

처음에는 부담이 되던 타이완을 전략 자산으로 전환하여 대 중국 정책을 달성하자는 미국의 구상은 1951년 5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NSC 48/5 문서로 구체화되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미

국의 타이완에 대한 정책목표는 소련이나 소련의 위성국 수중에 타이완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한 타이완의 방어능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에 1951년 5월 1일 미국의 군사고문단이 타이완에 도착하여 군사원조 계획을 감독하기 시작하였다.

NSC 48/5 문서에는 이미 타이완의 방어를 강화한다는 정책 목표가 수록되었지만,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워싱턴, 특히 국무부는 국민정부와 협조하겠다고 명확하게 약속하는 것을 기피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국민정부 외교부장 예공차오(葉公超)는 미국이 국민정부를 포기하려는 것은 아닌지 또는 미국이 진심으로 타이완을 원조하려는 것인지 의심하게 되었다.

10월 말 이후 미 국방부는 타이완 정부의 정식명칭을 ‘중화민국 국민정부(the Nat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약칭 NGRC)’로 적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12월 중순 백악관에서 정전회담 문제를 논의할 때 합동참모본부 의장 브래들리(Omar N. Bradley) 장군은 미국이 어떤 의제를 양보할 것인가 아니면 중공과 전력으로 전투를 할 것인가라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전쟁을 멈추고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 자리에 참석한 다수의 장교들도 이 의견에 동의하였다. 트루먼 역시 양보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으나 중국 본토로까지 전쟁을 확대할 생각은 없었다. 당시 정전회담 논의과정에서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상대방이 정전협의를 깨뜨리면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였고, 당시 워싱턴은 정전 관리체제와 관련된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제재 확대’라는 개념을 수립한 상태였다. 베이징은 무제한 사찰을 반대한 반면 워싱턴은 중공이 공격을 재개하

지 않는다고 부정할 수 있는 검증장치는 없다고 보았다.

중공을 포위하는데 이 ‘제재 확대’ 개념의 사용은 타이완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합동참모본부는 중공이 타이완을 장악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안전과 이익에 상당히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1952년 봄까지 타이완 방위에 대한 워싱턴의 공약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지만 상당히 진전을 한 상태였다.

아. 제8장 정치적 자산(1952년 3월 ~ 1953년 1월)

1952년 봄 한반도의 전황 보도는 공산군의 공중전과 지상전의 역량이 증강되는 반면 유엔군은 약해지는 추세였다. 그리고 유럽 동맹국도 재무장(再武裝)이 더디게 진행되었고, 반미(反美)는 아니더라도 반전(反戰) 정서가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미 합동참모본부가 한국전쟁 이전부터 취해오던 타이완에 대한 수수방관 정책의 수정을 고려하게 된 것은 중공의 동남아시아 지역 침략 가능성 때문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광대한 화교사회의 정치 성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당시 장제스는 중국 본토에서 중공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상징이 되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화교들을 응집할 수 있는 유일한 반공인물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국민정부에게 해외의 화교들과 연계하라고 촉구하였다.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유엔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부군 활용을 고려하였으나 1952년 8월 19일 국방부 무장부대정책위원회(Armed Forces Policy Council)는 가까운 장래에 국부군의 활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여 활용계획을 실행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한반도나 중국 본토에서의 국부군 활용을 반대하기

는 했으나 동남아시아에서의 사용은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1951년 초 미국 군사고문단장 체이스(William C. Chase) 장군은 국부군 유격대는 이미 연대급과 사단급의 기습 행동, 그리고 일부는 타이완 해협봉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그는 이들의 기습행동 규모와 빈도를 늘리고 그들의 활동을 자체적으로 통솔할 수 있게 협조하여 행동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건의하였다.

또한 체이스는 1953년 1월 국민정부의 육·해·공군이 개편을 끝내고 연합작전센터와 전술공군관제센터도 설립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국부군의 효율성을 미군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예산상의 문제점 그리고 재무관 파견이 허용되지 않아서 그들의 군사예산과 재정제도가 여전히 빈약하다고 언급하였다.

트루먼 정부 임기 말기에 국민정부에 대한 미국 정책기획자들의 기본 입장은 미국의 주된 목표가 여전히 중공을 압박할 수 있는 반공역량을 건립하는 것이고,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분으로 남아 전 세계 반공 중국인의 지지를 흡수하여 중공을 압박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었다. 결국 타이완이 ‘독립적이지만 중국과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정권을 유지하면서, 중국을 대표하게 결정된 것이다.

자. 제9장 의도된 모호함(1953년)

1952년 11월 공화당의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기존 미국 트루먼 정부의 대 공산당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 아이젠하워는 경선 때 한국전쟁 종결을 주요 공약으로 삼았고 당선 후에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직접 한국

의 전선을 시찰하였다. 그리고 1953년 2월 2일 타이완 해협의 중립화 명령을 해제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스탈린이 사망하였고 그의 후임자는 평화공세를 시작하였다.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 내부에 고위층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조직되었고, 대통령 국가안전특별보좌관 커틀러(Robert Cutler)가 국가안전정책의 전반을 재검토하였다. 이것은 ‘솔라리움 프로젝트(Solarium Project)’로, 핵심은 공산당에 대한 봉쇄를 유지하지만 약간의 ‘억제’ 논리를 추가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정책기획자들은 기본적으로 공산진영의 평화공세가 일시적으로는 전략이 바뀐 것으로 보이지만 변경된 것은 아니며 그들의 목적은 군비확충의 시간을 버는 것과 동시에 자유세계의 단결을 약화시키는데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정전협정 체결 후 국제사회에서는 중공의 유엔 가입을 요구하는 압박이 점차 증가하였고,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국민정부의 주요한 정치적 가치는 타이완과 중국 본토 이외 지역의 반공 중국인들을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국민정부가 해외 지역 중국인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타이완의 군사적인 가치에 대해 내린 결론은 장차 미래에 국부군은 중공에게 잠재적인 위협이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유세계의 전략적인 예비부대라는 것이었다.

차. 제10장 결론

1950년 1월 트루먼이 ‘수수방관 정책’ 성명을 발표하였음에도 군부, 의회 그리고 여론은 타이완과 중국을 분리하자는 입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트루먼 정부는 이미 타이완과 중국 본토의 분리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트루먼의 임기 마지막 1년 동안 워싱턴은 타이완을 ‘자유중국’으로 육성하여 미국이 아시아에서 공산당의 확장을 봉쇄하고 중공에 대항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계획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타이완 해협의 중립화 취소는 주로 중공을 압박하여 한국전쟁을 종결하려는 것이었다. 미국의 대 타이완 정책의 주요 목표는 타이완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적 도구와 전략적 예비부대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3. 타이완에 대한 더 넓은 이해를 위해

미국 자료를 통해 한국전쟁기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정책을 분석했다는 데 이 책의 성과는 높지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저자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주로 미국 정책당국 내부의 의견불일치, 특히 국방부와 국무부의 대 타이완 정책에 관한 갈등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이 책은 타이완 정책에 대한 미국 정책의 점진적인 변화를 해석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내용은 국무부와 국

방부의 대립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특히 외교문제와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결국 정치적 사안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의 합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미국 측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지만, 주 활용자료는 ‘미국대외관계사료집(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이다. 대외 공개 자료에 한정되었을 뿐 미국 내부의 정책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국무부 및 국방부, 백악관 등 정책 부서 내부의 문서철 활용이 부족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셋째, 미국과 타이완의 외교관계 분석에 있어서 주로 미국 자료만을 활용하고 있는데 타이완의 자료를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이 책에서 다루는 각 사안별로 간단하게라도 국민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었다라면 미국과 타이완의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번역에 있어서 한 가지 지적할 점은 단체·기관·기구 등의 번역어가 중국어 그대로 직역하여 문맥상 어색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8장에 기술된 무장부대정책위원회(Armed Forces Policy Council)는 일반적으로 ‘군사정책위원회’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저서가 갖는 장점은 타이완 학계의 축적된 연구 성과를 국내 학계에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한국과 타이완과의 학술적 교류도 희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역자 정형아는 국립타이완사범대학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아시아-태평양전쟁기와 전후 동아시아국제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국내에서 중국서적은 많이 번역되고 있지만, 타이완 도서는 번역이 거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책을 번역 소개해 준 점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